

동 자료는 2026.7.15.(수) 기획예산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시작시점[엠바고
해제시점 별도 공지]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기획예산처 업무보고

2026. 07. 15.

목 차

I. 상반기 주요 성과	1
1.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·경기 회복 뒷받침 ..	1
2.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강화	1
3. 재정운용체계 혁신을 통한 지방우대, 국민참여 제고	2
4.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응노력 강화 ...	2
II. 핵심 추진과제	3
1. 역점·개혁 과제	3
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	3
② 적극적·전략적 자원배분	5
③ 수요자(부처·국민 등) 중심의 재정운용	8
2. 지방주도 성장 과제	10
3. 국가정상화 과제	11

I. 상반기 주요 성과

- ◆ 전쟁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민생·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, 통합재정사업평가 도입, 지출구조조정 목표 제시 등 지속가능 재정의 기반 강화
- ◆ 지방주도성장 도모, 국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예타·민간투자 제도, 국민참여예산제도 등 재정운용체계 혁신

1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민생·경기 회복 뒷받침 (국정17-1)

- (전쟁추경)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총 26.2조원 규모 추경 편성,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(정부안 편성 19일 + 국회 심의 10일) 만에 처리
 - 금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.2~0.3%p 제고*, 소비자물가 상승폭 완화**
 - * 경제성장률 제고(%p): (한은) 0.2 (예정처) 0.21~0.29 (씨티은행) 0.18~0.36
 - ** 소비자물가 완화(%p, %, 재경부): (4월) △1.2 (3.8→2.6) (5월) △0.6 (3.7→3.1)

< 주요 우수사례 >

- ▶ ①전국민(석유 최고가격제, 대중교통 환급), ②서민층(고유가 피해지원금), ③취약계층(에너지 바우처, 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등)의 3대 패키지 지원을 통해 물가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
- ▶ 중동전쟁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확대, 저금리 정책금융 공급, 나프타 수입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산업 피해 최소화

- (신속집행) 공공부문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(60.2%) 초과달성(63.3%) 및 고유가피해지원금 등 추경 확정 3개월내 85% 이상* 집행完
 - * 추경예산 26.2조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.5조원을 집중 관리
- (기금자산의 혁신성장 투자 촉진) 「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」 최초 수립 및 「기금운용평가지침」 개정*, 연기금 국민성장펀드** 출시('26.5) 등
 - * 혁신성장 분야 가점 확대(1→2점), 평가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혼합 등
 - ** 연기금 투자풀 혁신성장(대체투자상품) 투자 규모: ('25.12) 200억원 → ('26.6) 1,300억원

2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강화 (국정17-1, 17-4)

- (통합재정사업평가 시행) 「통합재정사업평가」*를 도입('26.1) → '26년 평가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(36.2%**) 도출('26.5)
 - * 부처 자체평가를 전문가·시민단체 중심의 통합평가로 일원화→재정사업평가의 신뢰성·환류↑
 - ** 평가대상 2,487개 사업 중 901개 감액·통폐합 판정 → 최근 5년 평균(15.8%) 대비 2배 이상 (평가결과를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되, 필요시 이해관계자·부처 협의 등 통해 조정)
- (보조금 부정수급 관리) 현장점검을 통해 역대 최대* 부정수급 적발(2.25), 「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」 발표(3.10) 및 후속조치** 이행
 - * 적발건수: ('24)630 → ('25)992건 ** 신고센터 개설(4.1), 부정수급심사소위 신설 등 지침개정(5.20) 등
- (지출구조조정) 최초로 「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」을 마련하여 '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반영하고, 대국민 공개
 - 재량지출 15% 및 의무지출 10% 감축, 사업 10% 폐지의 목표 제시, 국무회의 토론*, 찾아가는 예산협의회 등을 거쳐 부처와 인식 공유
 - * 3.24일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토론, 5.12일 '27년 예산안 협조안건 국무회의 상정

3 재정운용체계 혁신을 통한 지방우대, 국민참여 제고 (국정 53-3)

□ (투자제도 개편) 예타·민간투자 제도를 개편하여 균형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국민 참여 확대

- 예타·민간투자 사업 평가시 인구감소지역 대상 인센티브를 강화*하고, 민간투자 사업에 ‘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**’ 도입

* 가중치: 경제성 △5%p, 지역균형 +5%p(예타 지침 및 상세 가이드라인 개정 完)

** 참여 의향 사업 5개 既 발굴(‘26.5월) → 출자자 협의 등 거쳐 ‘1호 펀드’ 출시(‘26.下)

〈 주요 우수사례 〉

▶ 예타 제도개편 방안(‘26.3), 민간투자 활성화방안(‘26.2)을 발표하고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타 운용지침·수행 총괄지침(‘26.5),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(‘26.2)

□ (국민참여·소통 강화) 국민참여예산제도를 개편하여 예산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, 국민·지방정부·부처 의견 수렴을 대폭 강화

-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국민제안 범위 확대(지출효율화 신설), 국민참여단·자문단 확대·개편, 찾아가는 국민제안 활성화 등 직접소통·참여 강화

※ 국민제안 2배 이상 증가(‘26.517→‘27.1,094건), ‘27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, 3,813억원 요구(전년대비 각각 2.9배, 12.8배 증가)

- 국민편성지침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(최초),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(1~5월), 타운홀미팅* 등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, 지방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(2월), 부처찾아가는 예산협의회의(5월)를 통해 ‘27년 예산편성 방향 협의

* 나라살림(4.28일), 예산 지출구조조정(6.8일)

4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응노력 강화

□ (중장기 전략) AI 대전환, 양극화, 지방소멸, 인구감소, 기후변화 등 구조적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

- 「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*」 출범(5.27일) →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광복 100주년 미래상 및 핵심 정책과제 마련 계획

* 국무총리(위원장), 경인사연 이사장 및 기획처장관(부위원장), 관계부처 장관급(위원)

- 타운홀 미팅*, 전문가 간담회 등 전방위적 국민 의견 수렴·소통 강화

* 청년 토크(5.19일), 중장기 국가발전전략(6.24일)

□ (분야별 대책) 시급한 정책과제는 중장기 전략 수립 전 대외 발표

- (AI) 국민 생활·산업 전분야 AI 가속화를 위해 총 7,540억원 지원 추진(3.18일, 6.19일)
- (노동시장) 공정수당 도입, 적정임금 보장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(4.28일)
- (일자리) AI 전환기에 대응, 일자리 창출 기업 인센티브 등 재정을 통한 일자리 확충 유도(6.9일)
- (인구구조) 결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유인 제고방안(주거·자산·세제 등) 마련(6.9일)
- (상생)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제5차 기본계획 수립(4.10일)
- (기후) 탄소중립 동력 확보를 위한 「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방향」 발표(4.27일)

II. 핵심 추진과제

1 역점·개혁 과제

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→ 구조적 위기 대응 및 선제적 미래 대비

◆ **광복 100주년(2045년) 대한민국 미래비전**을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, 산업대전환·양극화·지방소멸 등 **구조적 위기 극복 전략** 추진

(1)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

□ (**비전**) 추격형 국가를 넘어, 광복 100주년*(2045년) 대한민국이 글로벌 질서를 선도하는 **설계국가(rule-setter)**로 도약하는 비전 제시

- * ①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, 현재 청년들이 미래사회의 주축이 되는 시점
- ②교육, 노동, 연금, 지방 등 구조개혁은 중장기 시계 하의 로드맵 필요
- ③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 준비

○ 한 세대 앞을 내다보며, 성장, 포용, 국격 제고 등 **흔들림 없는 국가적 지향점**을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**핵심 전략** 마련

□ (**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**)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 제시

○ 일회성·선언적 전략 수립에 그치지 않고, 동 전략이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, 중장기·세부 계획 수립 등에 **영향·연계***되도록 설계

* (예) 관계부처, 주요 기관 등의 종합계획 및 예산안 편성

□ (**국민 주도**) 폭넓은 의견수렴*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전략으로 추진

* 대국민 공모(전략 명칭, 정책 아이디어 등), 설문 조사, 간담회 등 입체적 의견수렴 진행 중

○ 특히, 미래 사회의 주역인 **청년** 등 **다음세대의 시각***을 적극 반영

* 청년 목소리 반영을 위해 중장기 전략 민간 연구진도 30~40대 젊은 연구자 중심으로 구성

〈 현장 목소리 〉

▶ “미래 전략 수립 시 **한쪽 시각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** 담아내고, **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**하기를 희망” (‘26.6.24일, 중장기 전략 타운홀 미팅)

□ (**재정 연계**) 정책과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 등에 반영하여 뒷받침 → 실행력 높은 ‘살아있는 전략’ 수립

※ 향후 중장기 전략의 **법정계획화** 등 검토(예: 근거법률 제정)

(2)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추진

□ (5대 과제 대응) 당장의 민생 및 성장 잠재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 창출

① (AI 대전환) 범정부 차원에서 제조·돌봄·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피지컬 AI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전략 설계

② (양극화 완화) 세대·계층·산업 등 분야별 양극화 완화 핵심과제 추진

- AI·산업 전환 대비 일자리 연계형 재정지원, 초생애주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
- 취약근로자 처우개선 및 안전망 강화, 대·중소 상생 등을 통한 지방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

③ (지방주도성장) 5극 3특 기반 지방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

- 권역별 성장엔진 확충, 정주여건 집중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 육성*
* 포괄보조 확대, 초광역계정 신설 등 지방우대 및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추진
- 중장년층·외국인 등 지방이주·정착 유도를 위한 특화 지원 추진

④ (인구구조 변화 대응) 결혼·출산 친화적 제도개편, 고령층 노후소득·돌봄 강화 등 저출생·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정책방향 수립

- 지역 인프라 재편*, 포용적 이민정책 등 축소사회 적응 방향도 모색
* (예) 폐교 등 지역 내 유휴시설의 기능 전환(돌봄 등), 공공 인프라(학교, 보건소 등) 거점화 등

⑤ (기후위기 극복)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, 탄소시장 고도화 등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동력 강화

-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 에너지 대전환 뒷받침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
-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법 제정 및 거래소 신설 +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*(K-MSR) 도입 추진
* 배출권 경매물량 조정을 통해 배출권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“미래 핵심 성장동력은 AI 등 첨단산업이며,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인재의 체계적 양성·확보가 최우선 과제” (‘26.6.24일, 중장기 전략 타운홀 미팅)
- ▶ “과거에는 노력을 하면 이를 수 있다는 꿈이 있었지만, 작금의 현실은 노력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분위기... 성장하는 청년세대,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” (‘26.5.19일, 청년 LiveTalk)

□ (핵심 아젠다) 노동, 교육, 연금 등 대한민국 시스템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위한 가칭「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」제안

- 이해관계자가 많고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, 단계별 공론화, 사회적 합의, 추진방향 설계 등을 병행하는 장기 이행 로드맵* 마련

* 추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행 로드맵 수립 및 이행체계 구체화

② 적극적·전략적 자원배분 → 대한민국 대전환·대도약 선도 (국정17-1, 17-4)

◆ **랜드마크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면서도,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**으로
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, **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자원배분체계** 구축

(1) **성장동력 제고·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**

□ (**기본방향**) 회복을 넘어 「대체불가 대한민국」으로 대도약 뒷받침

- 증대된 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과 K자형 양극화 대응에 집중 투자
- 청년 등 다음세대와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

□ (**중점투자**)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핵심 랜드마크 사업에 중점

-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(①반도체·②피지컬 AI·③AI 데이터센터)를 총력 뒷받침
 - 산단 조성, 용수·물류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
- 증가가 예상되는 세수 여력을 활용하여 성장잠재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·지역·계층 확산을 위한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 투자
 - (성장엔진) AI 3축(반도체·피지컬AI·AIDC), 포스트 반도체 신산업 육성, 에너지 대전환, 문화 강국, 창업 지원 등
 - (양극화 대응) AI發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한 청년 일자리, 출산율 지속 반등, 주거지원, 복지 사각지대 해소, 농어촌 지원 등

< 랜드마크 사업(예시) >

- ① (AI혁신) 고성능 AI모델 개발, 제조암묵지·폴스택 AI 팩토리 등 MAX, 모두의 AI
- ② (포스트 반도체) 바이오, 미래모빌리티, 원전·조선, K-방산 등 고부가가치 산업
- ③ (청년) 혁신적 재교육과 일경험, 청년 주거안정, 자산형성 등 전주기 지원
- ④ (에너지 대전환) 재생에너지 보급·확산 및 핵심기술 R&D,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
- ⑤ (지방주도 성장) 성장엔진 보조금,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
- ⑥ (적극복지)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,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

□ (**미래대응기금 신설**)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적립하여 청년세대, 성장동력, 지방, 인재양성 등에 투자하는 기금 신설

(2) **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 실시**

- **(기본원칙)**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 → 저성과·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·폐지 또는 근본적 제도개선 추진
* 국민·시민사회 등 민간 제안,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, 지출효율화 TF 등 적극 활용

□ **(재량지출)** 재량지출 15% 감축, 불요불급한 사업 폐지

- 전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, 정보화 사업 시스템 다이어트, 정책금융·펀드 구조조정 등 유사·중복사업 재구조화·효율화 추진
- 불필요한 행사·홍보비 및 관행적인 정책연구비 축소 등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 적극 절감

- ① **(중소기업 지원사업)** 전부처 유사·중복사업 전면 재점검, 소액·뿌려주기 사업 폐지 등
- ② **(에너지 전환)** 산업 종료과정에 있는 에너지원(석탄 등) 지원 원점 재검토 → 신재생에너지 재투자
- ③ **(농업분야 정책자금)** 소규모·분절적 정책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폐합
- ④ **(ODA)** 소규모·저성과 사업을 통폐합하여 고성과 사업 중심으로 재구조화

□ **(의무지출)**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의무지출 10% 감축

- **(교육교부금 개편)** 4가지 원칙*에 따라 경제여건(경상성장률 등), 교육 수요(학령인구 변화율)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편

* ①1인당 교부금 및 교부금 총액 매년 증가, ②교부금의 급변동성 완화, ③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고등·평생·유아교육 등에 재투자, ④학령인구 변동 반영

- **(기초연금 개편)** 소득수준에 따른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의 두터운 보호와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편방안 검토
- **(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)** 소득 역전현상, 부정수급 해소를 위해 무급휴일 지급 제외(주 7→6일) 추진
- **(건강보험 지출효율화)** 건보재정(100조) 지속가능성* 제고를 위한 불요불급한 지출효율화 및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(재정지원도 수가개혁과 연계) 추진

* '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전환, '33년 누적잉여금 고갈(현 30조원) 전망

〈 현장 목소리 〉

- ▶ "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대규모 예산 사업들이 저출생·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"(6.8 지출구조조정 열린토론회)
- ▶ "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등 저성과, 유사·중복 등 불요불급한 지출의 과감한 절감과 함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필요"(4.29 재정정책자문회의 간담회)

(3)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자원배분체계 구축

- (성과관리 제도 전면개편) 「'27~'31년 성과관리 기본계획」 수립(12월)
 - (핵심 아젠다 집중관리) 대국민 영향력이 큰 국정과제(프로그램)를 선정하여 성과지표 및 세부사업 구성의 적정성, 성과달성도 등 집중 점검
 - (대상 재조정) 평가 실익이 없는 대상은 제외, 평가 사각지대 해소
 - (평가 실효성 제고) 평가의 수용성·이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등급 세분화*, 평가 결과의 이행 강제력 확보방안 마련
- * (예) ^{현행}통합·폐지·조건부존치·존치 → ^{개편}제도개선·점진적 축소 등 추가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“반복되는 존치·통합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패널티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고, 기금 자원구조와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방식을 맞춤형으로 차등화할 필요”(7.1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)

- (통합평가 내실화) 예산환류의 중심축으로서 통합재정사업평가 역할 강화
 - '26년 평가결과에 대한 심층진단(7월~)을 통해 개선안 마련, '27년 평가 내실화
 - 평가 조기 착수 및 평가단 규모 확대, 평가 기준 세분화*, 집단평가 도입** 등 평가 고도화 추진
- * (예) ^{현행}세부사업단위, 일률 삭감 → ^{개편}일부 내역사업단위, 차등 삭감 등
- ** (예) 쟁점사업에 대해 담당 평가위원 외 제3의 평가위원이 공동으로 심사
- 평가결과 보고서(6월)·미반영 사유서(9월) 공개, 온라인 기반의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평가의 투명성 제고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“평가 결과와 실제 지출구조조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 반영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, 평가 공백 방지 등을 위해 평가단 및 평가기간을 확대할 필요”(6.29 통합재정사업평가단 간담회)

- (공정한 재정원칙)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을 강화하고, 정책지원의 혜택을 받은 기업 수익을 공유하여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
 - (수익자 부담 원칙) 국립시설 입장료·이용료 현실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
 - 민간 대비 사용료가 현저히 저렴하거나 환경 변화에도 장기간 낮게 유지된 부담금의 적정수준 현실화 추진
- * (예) 출국납부금, 박물관·고궁·왕릉 입장료, 국립시설 이용료 등
- (이익 공유) 정부 투자 성과가 국가 경제에 환류되도록 제도개선
 - 기업 R&D 지원시 지분 확보가 가능한 투자형 R&D 신설 추진, 콘텐츠 산업에 대한 수익 공유 등 선순환 체계 구축
 - 상생기여금, 정부납부기술료 일부 등 수출금융 수혜기업의 이익을 수출생태계에 공유하는 ‘전략수출금융기금’ 신설 추진
- * 근거법(「전략수출금융지원법」) 재경위 소위 논의중

③ 수요자(부처·국민 등) 중심의 재정운용 → 국민주권재정 실현 (국정17-1)

◆ **실집행 중심 집행관리, 생애주기별 종합적 지원**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, 재정 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**참여·소통·협력** 강화

(1) 부처의 자율성·책임성 제고

- (**지출한도**)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반영한 지출한도 설정 및 통보
 - 대통령 주재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분야별 투자·재원배분 방향·우선순위에 관해 국무위원간 토론·합의 도출(4월 이전)
 - 재정당국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각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·통보
- (**자율편성**) 부처의 지출한도 내 자율적 예산편성권 보장
 - 각 부처는 지출한도를 엄격히 준수하여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절감재원을 마련하고 국정과제 및 중점투자과제 등을 자율 편성
 - 재정당국은 지출한도 위반 및 사전절차 이행(예비타당성 조사,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, 정보화전략계획(ISP) 등) 여부 등 필수 사항 위주 점검

(2) 예산 집행관리 체계 구조적·본질적 개편

- (**실집행 중심 집행관리**) 집행관리체계를 자금교부*에서 ‘실집행’ 중심으로 전환하여 자금조달 비용 최소화 및 국민의 예산집행 체감도 제고
 - * 현행 예산집행 기준은 각 부처가 보조·출연 등 사업수행 기관에 자금이 교부되는 시점의 집행을 → 최종 수혜자 전달시점과는 시차 존재
 - 사업별 집행 가능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금배정*부터 교부·실집행까지 이어지는 재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
 - * 과도한 자금배정시 연초 세입 부족분 조달을 위한 일시차입 이자비용 발생
 - 민간보조·R&D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실집행을 본격 관리하고('27년~), 지방정부 보조사업 시스템 개편 등 관리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
 - 관행적·획일적으로 추진해 온 목표액 중심 상반기 신속집행은 경제 여건에 따라 필요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 검토

(3) 국민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책 마련

- (종합지원 강화) 국민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빈틈없는 재정지원이 되도록 핵심대상(청년·고령층·장애인)·분야(일자리·주거·자산형성 등)별 대응방안 마련
 - (청년) 청년들의 일자리·주거·자산 형성 어려움 완화 및 자립기반 확충 등을 위해 청년 생애주기·상황별 촘촘한 재정투자 대책 마련
 - (고령층)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적 안착, 어르신에 대한 다양한 근로기회 제공* 등 안정적 노후생활 적극 지원
 - * 노인일자리 지원(26년 115만개), 고령자 계속고용 사업주 지원(고령자통합장려금) 등
 - (장애인) 장애인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장애인 돌봄부터 자립까지 소득, 일자리, 돌봄 등 다각적 지원 강화
 - *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, 장애인 일자리 확대,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이행 지원 강화 등
- (정책체감도 제고) 국민들이 정부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AI 등 활용한 정부 정책포털 단계적 고도화* 지원
 - * 고용24, 온통청년, 혜택알리미 등 대상 사업정보 확인, 맞춤형 혜택 추천, 자동신청 등 고도화 검토

(4) 재정 소 과정 참여·소통·협력 강화

- (국회 등 소통 강화) 차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마련시, 중점투자방향 및 지출혁신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, 전문가·시민단체 의견수렴 내실화
 - 정부안 편성시 국회 의견 수렴 범위를 기존정책위 → 추가상임위까지 확대, 당정협의 조기 개최(8월 → 7월) 등 국회·정당과의 소통 강화
- (재정정보 공개 확대) 중앙·지방·교육재정 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「모두의 재정」을 구축('26.12)하고, AI 친화적으로 재정정보 공개
 - 중앙재정 통계 확대는 물론, 지방·교육재정 통계도 중앙재정과 유사한 항목 중심으로 확대하여 통합·제공
 - * ('25.12월) 중앙재정 157종, 지방재정 51종, 교육재정 34종 공개
→ ('26) 중앙재정 +15종, 지방재정 +95종, 교육재정 +245종 추가 연계 추진 확대
 - AI 인식이 쉽게 사업설명자료를 표준화하고 정부안 공개시(10월)부터 적용
 - * AI 기술을 활용하여 통계분석, 재정보고서 분석, 수혜서비스 추천 등 맞춤형 정보 제공
 - 예산 전과정(예산, 집행, 조달)을 연계하여 대국민 공개하는 시범사업 실시

2 지방주도 성장 과제

- ◆ 예산편성시 **지방우대 원칙**을 강화하고, **포괄보조 확대·초광역계정 신설** 등으로 지방정부 보조사업의 자율성 제고 및 **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** 제공

① 재정사업 지방우대 강화 (국정54-4)

- (**재정사업 지방우대**) 수도권과의 거리, 지역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예산안 편성 과정에 지방우대 원칙을 본격 도입
 - '26년 아동수당 등 7개 사업*에 지방우대 원칙 시범 적용
 - * 아동수당, 노인일자리,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, 국민내일배움카드, 지역사랑상품권, 창업사업화, 중소기업 혁신바우처
 - '27년 예산안 편성 시 지방우대원칙을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*
 - * (우대방식) ①지원금 상향, ②자부담 인하, ③사업물량 확대, ④지원율 인상 등 (우대기준)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, 지역발전 수준, 인구소멸 정도 등을 종합 고려

② 지방정부 보조사업 자율성 제고 (국정53-3)

- (**포괄보조 확대**) 지방정부 자율편성 예산의 확대를 위해 1단계 포괄보조 이관('26예산 5.7조원)에 이어 2단계 이관 추진
 - * '26년 포괄보조 예산: 10.6조원, 전년대비 +6.8조원 (이관 +5.7조원, 순증 +1.0조원)
 - 지역수요에 기반한 지역R&D,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노후 산업단지 개선, 스마트농업, 목재산업 등을 포괄보조로 전환
- (**초광역특별계정 신설**) 5극3특 구현의 일환으로 권역내 지방정부간 협의를 거쳐 기획한 사업을 지원하는 지특회계 초광역계정 신설('26.6. 법개정 完)
 - ①성장엔진 R&D·보조금 등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②교통·교육·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중점 지원하고 편성과 집행의 특례* 부여
 - * 예시: 신규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면제 등

③ 행정통합 재정인센티브 제공 (국정49-2)

- (**행정통합 재정지원**) 전남광주통합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최대 5조원,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 재정 인센티브 지원
 - 재정 인센티브가 일자리 창출·산업 활성화 등 5극 3특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
 - 재정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통합 지방정부가 책임성·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·사무를 함께 이관

3 국가정상화 과제

◆ 7대 사회악으로 분류된 ①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②미정산·미징수 관리, 현실과 유리된 법령·제도 개선을 위해 ③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추진 중

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(국정16-3)

- (빈틈없는 적발) 「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」을 이행하기 위해 합동현장점검(13,240건+α)을 차질없이 마무리(~10월말)
- (타협없는 후속조치) 신설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(기획처)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부정수급 적발 사업에 대한 제재 등 후속조치 실효성 확보(9월~)
 -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(~8월) 및 제재부가금 강화를 위한 보조금법 개정(금년내) 추진
- (국고보조금 통합 관리) 자치단체보조금 포함 모든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('26.6~9월 BPR·ISP / '30.1월 개통)

② 국고보조금 미정산·미징수 관리

- (미정산·미징수 확인·정리) 사업 종료 후 정산이 지연되거나, 정산 완료 후 예탁계좌·지방정부 계좌에 남아있는 국고보조금 확인·정리*
 - * '26년 정리 대상은 2.7조원 규모로, 2~6월 9,341억원 정리 완료(국고수납 6,068억원 포함)
- (상시관리체계 구축) 각 부처 자체점검(年 2회), 제재·인센티브*, 교육 강화 등 상시관리체계를 통해 미정산·미징수 조기 해소에 진력
 - * 집행잔액 미반납 사업 추가교부 제한(5.22~), 지특회계 포괄보조 인센티브 차등배분('27 예산~) 등

③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

- (기금 신설) 주가조작, 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·운용하기 위한 기금 신설
 - 법제처 검토 후 근거법률 발의 완료(5.29일) → 국회와 지속 협의를 거쳐 금년 중 법률안 제정 노력

<통합기금 포함대상 주요 신고포상금>

부 처	금융위	공정위	국세청	법무부	기획처	개보위
유 형	주가조작, 회계부정	담합	탈세	마약신고	보조금 부정수급	개인정보유출

※ '27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통합기금 포함 대상 사업 추가 발굴중(~'26.8)